



지역난방산업은 에너지 시장의 총이 국민과 함께 새 지평을 열어갑니다

(지역난방산업의 안정 기반확충에 온 힘 쏟을 터)

정 병 철 협회 상근부장

Q 지역난방협회의 설립배경과 목적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A 집단에너지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위해 선도적 역할 수행을 ...

집단에너지사업은 99년 2월 지역난방사업의 시장개방으로 민간사업자가 출현.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이제 우리나라의 중추적 에너지시스템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상호 신기술력 제고와 정보교류 협력을 통해 역량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업계의 의견이 대두 되게 되었습니다. 각종 법령의 규제완화와 공정경쟁, 제도개선 등을 추진해 나감으로서 집단에너지사업의 안정 기반을 구축하고 궁극적으로 난방사업

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산업차원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협회를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Q 회원사의 현황 및 확대방안에 대해

A 2005년도 계획 회원 50개사로 확충할 것

한국지역난방공사를 비롯한 주택공사, 서울시 SH공사 부산시 등 공공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GS-POWER, 인천공항에너지, 인천종합에너지, 안산도시개발과 오산에너지 등 민간지역난방사업자, 한전기공 등 보수업체, 보일러 생산업체 열 배관 생산업체 등 30개의 회원사가 현재 가입되어 있으며 앞으로 20개 사업자가 더 가입 예정으로 있어 회원사를 50개사로 늘여

나아갈 계획입니다.

Q 사업추진계획 및 역점사업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A 회원사의 권익신장과 역량강화 및 경쟁력 확보가 최우선

첫번째로 회원사의 권익신장을 위한 사업추진에 주안을 두고 신기술의 정보교류와 연구개발을 통한 역량강화 및 협력 체제를 구축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난방산업의 안정적 기반 확충을 위해 사업의 위협요인제거와 법령 등 제도개선, 에너지시장개방과 에너지산업구조개편에 따른 지역난방사업의 미래생존전략 수립과 경쟁력확보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Q 우리나라의 지역난방의 현주소를 진단해 주십시오

지역난방사업은 1985년 서울시가 목동지역에서 처음으로 공급하기 시작한 이래 올해로 20년이 지난 현재 지역난방부문의 8개 사업자가 21개 지역에서 산업단지부문의 20개사업자가 21개 사업장에서 가동 중에 있습니다. 공동주택 12,360천호 대비 101%인 약 130만호 빌딩 2,786개소, 528개소의 산업체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6년까지는 총 159만호를 확대보급 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지역난방부문은 현대건설(주) 포함 5개 사업자가 부산정관, 인천 논현, 화성, 동탄, 인천송도, 파주교하, 대전서남부, 오산세교지구 등 7개 지역에서 산업부문은 2개 사업자가 2개 사업장에서 도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업지구에는 2003년 말 기준 고양·분당 등 10개 지역의 총 229건물에 지역냉방 열이 공급되어 총 84,133USRT, 흡수식냉동기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지역난방공사를 제외한 사업자의 사업지구에는 서울시, 부산시, 한국 CES, GS POWER안산도시개발 등 8개 사업자가 9개 지역에서 총 162개 건물에 지역 냉방 열을 공급하여 총 72,072USRT의 흡수식냉동기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한편 집단에너지 공급중인 42개 사업장의 사업 계획기준 시설현황은 발전보일러 14,133t/h 발전기 3,316MW이며 9개 사업장에서 도입추진 중인 집단에너지시설은

사업계획으로 발전보일러는 지역난방이 637G/h, 산업단지의 1,890t/h 발전기는 1,672MW입니다. 좀 더 상세한 현황에 대해서 협회지의 다른 지면의 집단에너지 현황자료를 참고하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Q 에너지시장에서의 지역난방산업의 미래생존 전략은

A 에너지관련 정부정책이 지역난방산업을 포함한 모든 에너지산업체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조성과 사업 규제 및 제도개선이 선행 과제

지역난방업체는 현재 사용자 및 시장으로부터 거센 위협과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봅니다. 공급구역의 충돌, 요금제도의 미비점에 대한 개선, 전력거래의 불확실성, 소비자의 공급망 이탈, 에너지공급구역의 조정, 천연가스 및 전력망에 대한 개방적 접근 등 국가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개발과 개선방안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난방산업이 공정하게 에너지 시장에서 경쟁에 참여하고 권익을 확보 할 수 있는 대응전략수립과 역할수행이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2007년도부터 시행예정인 배출 총량제도와 관련하여 허용 총량할당 배출허용의 거래 등 관리제도, 고체연료 사용금지와 청정연료 사용의무화 등 위협요인의 해소와 함께 지역난방사업에 공정하게 적용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제시하고 반영시키는데 영향력을 행사하여야만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앞으로는 지방 도시지역의 중·소규모의 택지지역을 대상으로 구역형 집단에너지사업(CES)을 정부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ES사업은 04년 7월부터 시행중인 전기사업법상의 구역전기사업의 연계하여 사업자들이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가스사업자, 주택사업자들이 전국 각지에서 사업추진을 희망하고 있어 집단에너지사업의 지방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집단에너지 확산 분위기를 집단에너지사업의 지방화·전국화의 계기로 삼기위해 집단에너지사업 협회 제도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역난방사업이 성공적인 미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 및 지역, 에너지정책, 정부규제 및 제도개선 등에 대하여 산업차원의 협회의 선도적 역할과 노력이 더욱 절실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Q 05년도 사업계획 중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입니까

A 지역난방 열 요금 제도개선 및 열 요금 상한(price-cap) 재 산정 공동 연구용역 추진 중

지역난방 열 요금 구조는 열 요금은 열 생산에 소요되는 총괄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연료비는 연료비 연동제로 연료비를 제외한 고정비 등 제비용은 열 요금 상한제에 의해 조정되고 있습니다. 연료비 연동제는 연료비를 산정함에 있어 일부 추정치 적용에 대한 사후정산 및 열병합 발전소의 열과 전기의 원가배분의 미비 등으로 인해 열 요금 조정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열 요금 상한제는 산업자원부에서 매년 사업자별 상한을 산정하여 고시도록 되어 있으나 99년초 최초 고시 이후 조정된 적이 없어 생산요소 투입량변화 열에너지 수요 변동 등 경제적 여건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으로 재산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열 요금 상한제도의 근거규정인 열 요금상한 산정기준(2000년 1월 제정, 2002년 10월 개정)도 지역난방사업 형태의 변화, 사업자의 다양화 등을 고려하여 부분적으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A 현행 사업자별 상한제도 보완 필요

예를 들면 온수 냉수, 전력 등 에너지 연산품과 에너지와 비에너지 제품의 결합 생산에 대하여 원가처리기준 및 상한산정방법이 투명하게 정립되어야 합니다. 또한 동일지역 (지자체)내에서 복수사업자가 등장함에 따라 현행 사업자별 상한 제도를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협회가 주관하여 산자부와 지역난방 8개사업자가 공동 참여하는 연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동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지역난방 열 제도개선 및 상한제도의 추진실태

를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진단한 후 관련제도의 개선안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열 요금 상한 재산정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공동 연구 사업은 2004년도 10월 28일 최초 협의를 거쳐 동년 12월 20일 산업자원부로부터 검토의견서를 보내줌에 따라 본격적인 협의를 거쳐 그동안 17차의 의견조정 마치고 협약을 맺어놓은 상태이고 곧 연구 용역을 착수할 것입니다. 두번째 사업으로는 지역난방사업자별 열 공급규정 차이가 발생함에 따른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표준 약관제를 정립하고 심사여부는 지역난방사업자 전체가 공동 연구를 통하여 마련해 보고자 이를 추진 준비 중에 있습니다.

Q 지역난방사업자와 도시가스사업자간 연료분쟁이 지속되고 있는데 그 원인을 어떻게 진단하시며 처방은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A 정부를 비롯한 양 사업자간에 양 균형발전과 공정 경쟁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불공정한 가격구조개편과 도시가스의 직공급, 양 사업법 대한 검토, 보완 개정 등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정부가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02년 12월)>을 양자 간 갈등해소를 도모하여 왔으나 지역난방공급이 확대되면서 아직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사업자간 이해조정이 쉽지 않음에 따라 2014년 8월부터 양사업자 공동발전방향 연구 용역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내용을 살펴보면 ①기존 도시가스지역이 난방용 시설 유휴화에 대한 보상문제, ②신규 집단에너지공급지역에 대한 취사용 가스요금신설, ③집단에너지시설에 대한 가스 의무공급, ④가스 직공급 범위확대문제, ⑤양 사업자간 상호자유진입 허용 등에 관한 타당성 및 대안모색, ⑥관련법령 등 제도개선 과제 발굴 등입니다.

A 두 사업의 성격을 우선 비교해보면

지역난방사업은 경제적으로 생산된 에너지를 공급 함으로서 에너지절감과 환경개선 및 국민생활 편익증

진을 실현하는 공익적인 사업입니다. 도시가스사업이란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난방시설에 연료를 판매하는 독점적 소매사업자인 것입니다. 사실이지만 집단에너지사업은 자원이 부족하고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매우 적합한 선진 에너지시스템이라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극대화를 위한 확대보급은 국가적인 편익을 가져옴에도 다만 기득권상실을 우려한 도시가스사업자들이 집단반발로 인해 분쟁이 지속되고 있으며 확대보급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해도 과언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A 도시가스 공급거부는 소비자를 무시한 불공정한 공급자의 횡포

도시가스를 의무 사용토록 해놓고 공급을 거부하는 것은 공급사업자의 부당한 횡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도시가스 공급권역을 정하여 타 사업자가 사업을 못하도록 하는 것은 수요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고시지역 내 기존지역은 소비자의 선택권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도시가스 권역 내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취사용 도시가스를 공급 받을 수 있도록, 도시가스사업법 고치고 공급규정도 다 바꿔 공정하고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도시가스 사업자의 직접공급범위 확대, 즉 집단에너지사업자와 같은 대량사업자에게도 발전용과 같이 도매사업자가 되는 가스공사가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확대 개방해야 합니다. 이것이 도시사업자와의 마찰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양 사업자가 고시지역 내에서 자유경쟁과 참여할 수 있도록 과감히 시장을 개방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안이 아닌지? 지금과 같은 왜곡된 시장구조와 현상을 정부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상황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Q 우리나라 에너지시장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세계의 모든 에너지산업은 전통적으로 생산자 즉 공급자 중심의 산업으로부터 점차 소비자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급자가 제공하는 가격과 품질의 에너지를 일방적으로 소비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으나 지금은 에너지산업의 규제완화와 시장개방, 경쟁증대 등 요인에 의해 이러한 공급자 중심의 시장구조가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 에너지산업도 변화를 겪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난방분야에 있어서 개별난방에서 지역난방으로 전환추세는 소비자 욕구, 에너지시장 여건에 따른 당연한 시대의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에너지산업의 구조개편과 에너지시장이 공정한 자유경쟁체제로의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덧부쳐 말씀드리면 지역난방 공급대상 지역에서 난방방식을 지역난방으로 선택할 경우 취사용 가스의 공급이 가능한 정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언제까지나 현재와 같이 묶어놓은 공급구역에 안주할 수 없는 국내외적 여건을 감안해볼 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Q 끝으로 회원사들에게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A 작년 10월19일 회원사들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의 한국지역난방협회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힘을 모아주신 회원사 여러분들과 특히 협회창립에 주역을 맡아주셨던 정동윤 초대회장, GS-POWER의 정천수사장, 정광우 오산에너지사업장님과 범인설립을 허가해주신 산업자원부 장관님, 이원걸 자원정책실장, 허경 에너지관리과장, 염택진 서기관님에게도 이 지면을 통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에너지시장에서의 우리지역난방산업은 가장 앞서가는 에너지 산업의寵兒이긴 하지만 만만치 않은 도전과 위협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되지는 않을까하는 걱정을 또한 떨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시장 환경의 변화와 도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감으로서 회원사 여러분 모두가 성공적인 미래를 맞이할 수 있길 당부 드립니다. 다함께 도약의 새 지평을 활짝 열어가길 바라는 바입니다.